

광주·전남 행정통합 갈등 일단락…‘주 청사’ 불씨 남아

명칭·소재지 놓고 신경전…정치적 절충 등 ‘숨 고르기’
시장 선출 후 재점화 가능성…후보자 입장 표명 등 관심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했던 통합 명칭과 주 청사(소재지) 문제가 정치권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주 청사 논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절충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판도라의 상자’로 불려온 주 청사 문제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통합시장 선출 이후로 판단을 유보한 셈이라는 해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4차 간담회에서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주 청사는 특정하지 않고 광주시정, 전남도청(무안), 전남 동부청사(순천)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기로 했다.

명칭과 청사 문제는 통합 논의 초기부터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초 ‘광주전남특별시’ 명칭과 기존 청사 활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는 사·도 특별법 초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명칭에서 어느 지역이 앞에 서느냐를 두고 광주에서는 정체성 약화 우려가, 전남에서는 광주로의 흡수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후 지난 15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사·도·국회의원 간담회는 사실상 명칭과 주 청사 문제를 둘러싼 합력투기의 연속이었다.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를 놓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히 1월 21일 열린 2차 간담회에서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명칭에 따라 소재지를 맞바꾸는 방식은 어떠냐”는 이른바 ‘빅딜 안’을 제시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은 명칭과 청사를 동시에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통합 논의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갈등은 지난 25일 3차 간담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3개 청사를 유지하면서 주된 행정 중심을 전남(무안)으로 한다는 잠정안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알려지자 광주 지역 반발이 거세졌고, 동부권에서는 광주 중심 통합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튿날 강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 청사는 광주가 돼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혼란은 더욱 증폭됐다.

결국 4차 간담회에서 도출된 최종 합의를 보면, 주 청사를 광주로 정하고, 다른 지역 간 우려를 절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식 명칭에는 ‘전남’을 앞세우고,

약칭으로 ‘광주’를 유지해 상징성을 나눴으며, 주 청사 역시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다만 이러한 절충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명칭에서 광주가 다시 뒤로 밀린 데 대한 광주권의 불만, 약정 유지가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 주 청사 지정이 미뤄졌을 뿐이라는 점에서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

다는 평가다.

특히 주 청사 결정 권한이 오는 7월 1일 선출될 통합시장에게 넘어가면서, 이 문제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통합시장 경선에 나설 입지자들 역시 지역민들로 부터 주 청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 경선 국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

온다.

김영일 전남도당위원장은 “명칭과 청사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컸지만, 대통합의 정신으로 기존 가안을 내려놓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도 “법안 발의 이후에도 충분한 속의 과정을 거쳐 사·도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통합 쟁점 정치권 합의 후폭풍…각계각층 반발 확산

행정통합 소통 플랫폼·공무원 내부 게시판 내 비판 쇄도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치권 합의의 불씨를 놓고 시민과 공직사회 등 각계각층의 반발도 거세다.

2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소통 플랫폼에는 “주청사 결정을 통합 이후 선출될 특별시장에게 맡긴 것은 여론을 피하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적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통합시장이 근무하고 예산·인사·총무 기능이 집중되는 곳이 사실상 주 청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칭만 없

을 뿐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불신도 제기됐다.

주민투표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국회 전자청원에는 통합 중단과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시민을 중심으로는 통합 이후 도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제정과 정책의 우선 순위가 전남 전반으

로 분산돼 광주에 대한 지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청사와 공공 기능이 전남으로 기울 경우 청년 유출과 도시 공동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광주와 인근 생활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는데도 상징성과 권한 배분에서 광주 중심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게시글에는 사·도지사 등 통합 논의를 주도한 정치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선거 이후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공직자 내부 게시판에서도 명칭과 주

청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 내부 게시판에는 “퍼주고 무시당하기가 광주 특징이다”, “이번 합의의 진짜 함정은 ‘공무원 고립화’다”, “통합 반대 전자서명에 동참하자”는 등 수십 건의 글과 댓글이 올라왔고, 각 글의 조회 수도 500~900여건에 이를 정도다.

한 공직자는 “(이 합의안대로라면) 광주시 공무원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며 “어슬픈 합의안에 따른 시민 불편 사안을 정리해 사·도민 여론을 끌어내야 한다”고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 “광주 자치구 ‘일반시’ 전환을”

행정적 역차별 우려…자치권 갖춘 ‘거점형 모델’ 제안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광주 5개 자치구를 독립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춘 ‘거점 일반시’로 전환해 전남 사·군과 대등한 행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행정적 형평성과 실질적 자치권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의 자치구 체제를 유지한 채 통합이

추진될 경우 광주 구민들에게 행정적 역차별과 정서적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남지역 사·군이 독자적 도시계획권과 재정 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광주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돼 핵심 권한이 제한돼 통합 후에도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추진위는 “특히 북구와 광산구 등 주요 자치구는 인구 40만을 넘거나 육박하는 거대 도시임에도 제한된 자치권과 재정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

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체계를 특별시·시·동 구조로 단순화해 복잡한 위계 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수의 거점을 연결하는 거점형 통합 모델을 조성, 집중화와 도시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시 전환을 통해 도시계획권과 산업 정책권, 재정 운용권이 확대되면 주민 밀착형 행정과 맞춤형 복지·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일반시 전환은 광주의 도시 브랜드와 정체성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전남 통합 북구권역 시민공청회

“AX·자율차·쇼핑 품은 성장 축”

(인공지능전문)

시민 400명 참여…광역 경쟁력·강화·자치권 보장 공감

광주시는 시교육청, 시의회, 북구, 북구의회와 함께 27일 오후 북구문화센터에서 북구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북구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권역별 시민공청회 네 번째 일정으로,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시의장, 최무송 북구의장을 비롯해 안전·교통·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보완 과제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문인 북구청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시민과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는 경제, 행·재정, 교통, 복지, 교육 등 통합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광주시 관계 실·국장들이 직접 답변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참석 시민들은 통합을 통한 광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는 한편 광주지역 정체성 유지, 기존 자치구 권한 축소 우려, 행정 서비스 접근성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들은 특히 행정통합으로 인한 교육·보육정책 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청년기 머물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 마련 △농촌학교 소멸 대책 △기초자치단체 단위 교육자치 보장대책 △출생아수 등 지역 간 보육정책 격차 완화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행정 통합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과 돌봄, 인제 양성 체계가 광역단위로 촘촘하게 연결돼 아이들이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북구는 NPU(컴퓨팅센터, 복합쇼핑몰, 자율주행차 실증)를 품은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통합으로 광주의 산업을 키우고, 일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전남 지선 입지자들, 출판기념회 순연

이해찬 전 총리 추모

‘민주화의 거목’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절차가 이뤄지면서 광주·전남의 6·3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출판기념회 등 공개행사를 순연하며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31일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다음달 7일로 연기했다. 김 교육감은 이 전 총리를 애도하고자 축하 화환을 받지 않고 저자 사인회를 생략하는 등 당일 행사도 조용히 치르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 가운데 광주 동구청장 선거를 준비 중인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은 오는 31일로 예정했던 출판기념회를 이 전 총리 장례가 끝나는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남 더센터서무발전소 대표, 서대석 전 서구청장 등도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출판기념회를 각각 다음달 1일과 6일로 미뤘다.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성현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남구 수석부의장도 오는 31일 예정했던 출판기념회를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강성희 전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도 오는 31일로 발표했던 출판기념회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